「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4호(2014 겨울): 301-334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17 No.4 (2014 Winter)

부산시민의 신뢰-유형별 현황과 영향요인 분석*

류태건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사회자본의 핵심요소인 신뢰의 유형별 현황과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들을 분석했다. 우선, 이론과 실증조사분석을 바탕으로, 37개 구체적 신뢰대상을 10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이들 신뢰유형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신뢰수준(백분위값)은 특수신뢰(71.25)-국가공동체신뢰(66.83)-지역공동체신뢰(66.52)-민주주의체제신뢰(63.5)-교육기관신뢰(54.84)-선거신뢰(54.58)-지역공공기관신뢰(53.66)-중앙공공기관신뢰(46.95)-사회단체신뢰(44.66)-일반신뢰(44.27)의 순으로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자의 부산시조사와 세계가치조사의 일부 동일한 설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부산시민의 신뢰유형별 신뢰수준은 한국인 평균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상관분석결과, 이들 10가지 신뢰유형들은 모두 상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모든 유형의 신뢰는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형을 불문하고 신뢰는 다다익선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신뢰의 영향요인들은 그 범주(경제적, 정치적 등의 범주)별로 영향을 미치는 신뢰유형이 다르고, 또한 각각의 개별 영향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신뢰유형의 종류와 그 영향력의 방향은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신뢰의 영향요인들 중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및 정치관심은 10가지 모든 신뢰유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의 크기는 대부분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신뢰의 증진은 시민들의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및 정치관심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기를 제안했다.

주제어: 신뢰, 사회자본, 부산

Ⅰ. 서론

본 논문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증조사를 통해 사회(적)자본의 한 요소인 신뢰의 유형별 현황과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발전 내지 사회발전의 기본요소로서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에 덧붙여, 1980년대부터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1]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사회자본이란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켜 사회의 효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3A2033769)

1) 사회자본 개념의 지적 배경은 공동체 생활을 강조한 뒤르카임 혹은 자발적 결사체 활동의 민주적 효과를 강조한 토크빌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사회자본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분석은 삐에르 부르디외(1980; 1986)에 의해 이루어졌다(Portes 1998: 3)고 한다면, 서구에서 본격적인 사회자본연구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

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및 연결망과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Putnam 1993a: 167)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경제성장, 복지,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Putnam 1993a, 1993b; Coleman 1988; Grootaert 1996; Fukuyama 1995)

사회자본 연구자들은 특히 신뢰를 사회자본의 핵심요소로 간주하면서(Putnam 1993a; Fukuyama 1995), 신뢰의 생산적 효과를 강조한다. 신뢰가 사회기능을 효과적으로 작동케 하는 협력행위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신뢰란 간단히 말해 불확실성 속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서,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신뢰는 국가나 시민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능력의 바탕이 된다. 토론과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라고 볼 때, 토론과 타협과정의 효율성을 기본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상대방이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뢰는 경제 주체들 간의 거래비용을 감소하고 협력적 행위를 촉발하여 경제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신뢰의 이러한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신뢰 내지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국가, 사회 혹은 지역의 발전과 관련하여 매우 실용적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재도입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 해당 지역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역발전정책들은 주로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역발전은 지방정부 혼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와 주민, 그리고 주민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사회자본을 필요로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이러한 사회자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조사를 통해 사회자본의 핵심요소인 신뢰의 유형별 현황,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분석해보면서 부산광역시의 사회자본의 일면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다양한 유형의 신뢰에 대한 부산광역시 전체 차원의 경험적 연구가 부재한 현실에서,[2] 본 연구는 그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래 제II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서 신뢰의 개념, 유형, 기능 등에 관한 이론적 입장을 정리하고, 제III장에서는 조사연구방법을 설정하며, 제IV장에서는 조사결과를 분석한 뒤, 제V장에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다. 특히 제IV장에서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WVS)의 관련 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몇 개 국가의 신뢰 현황을 살펴보면서 부산시 신뢰현황에 대한 비교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검토

1. 신뢰의 개념

신뢰란 무엇인가? 선행연구들에 제시된 신뢰의 개념정의 몇 가지를 먼저 소개한다. Deutsch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DBpia, 한국학술정보(KISS), 교보문고스콜라, 국회도서관의 자료검색 결과임.

(1958: 266)는 "어떤 행위자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행위자가 특정한 행위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 Gambetta(1988: 217)는 "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행위자를 감시 혹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행위자나 행위집단이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이라 판단하는 주관적 확률"; Rousseau 등(1998: 395)은 "상대방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기반하여 취약성을 감수하려는 의도가 있는 심리적 상태"; Doney 등(1998: 604)은 "어떤 행위가 상대방에 대해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기꺼이 상대방에게 의존하여 행위하려는 자발성"; 박찬웅(1999: 39)은 "한 행위자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라고 신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들을 염두에 두고 신뢰의 개념을 분석적으로 이해해보기로 한다.

신뢰는 Hardin(1998: 12)과 같이 'A는 B가 X 할 것을(혹은 B의 X에 대해) 신뢰한다'라는 표현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뢰는 신뢰대상의 어떤 행위나 속성 등을 신뢰의 근거(X)로 하여 신뢰대상(B)에 대해 형성하는 신뢰주체(A)의 어떤 심리상태(혹은 행위정향)이다. 신뢰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신뢰의 심리상태, 신뢰주체, 신뢰대상 및 신뢰근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신뢰는 어떤 긍정적 기대심리이다. (반면에 불신은 어떤 부정적 기대심리이다.) 분석적으로, 신뢰는 신뢰주체의 인지적, 감정적, 평가적 정향들로 구성된 심리상태 혹은 행위정향으로서, 신뢰대상에 대한 인지와 감정에 기반한 신뢰대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Barber 1983: 9; 김우택·김지희 2002: 34; Mayer et al. 2007: 349).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뢰주체는 신뢰대상에 대한 완벽한 인지적 정보를 가질 수 없고 또한 신뢰대상을 완전하게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에, 신뢰대상은 신뢰주체의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 부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신뢰주체의 긍정적 평가는 신뢰대상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배신의 위험에 취약한 상태로 놓여있는 주관적 기대(expectation)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신뢰는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지에서 신뢰는 관계적(상호의존적) 혹은 사회적 개념이다. 이때 신뢰주체(A)는 인간 개인이나 집단이 될 수 있다. 신뢰는 인간의 심리현상이므로 신뢰주체는 일단 인간 개개인이다. 다만 집단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집단심리로서 어떤 신뢰대상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집단을 신뢰주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민족집단으로서 한국인은 일본인 혹은 미국인에 대해 보편적으로 일정 수준의 신뢰를 공유할 수 있다.

한편, 신뢰는 인간의 심리현상이므로 신뢰주체는 인간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지만, 신뢰대상(B)은 개인이나 집단, 제도나 규범, 혹은 물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국회의원, 국회라는 집단, 대의 제도, 다수결의 규범, 혹은 중고자동차를 신뢰하거나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신뢰대상의 신뢰근거(X)는 신뢰주체가 신뢰대상을 신뢰하는 근거로서, 신뢰대상의 일반적 혹은 구체적 속성, 상태, 행위, 역할 등의 특성(신뢰성. trustworthiness)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회에 대한 신뢰는 국회의 대의기능의 속성, 여야 의석구성의 상태, 의원의 행위나 역할 등에 근거해서 형성될 수가 있다. 게다가, 예를 들어, 국회의 대의기능이라는 일반적 속성도 여론수렴기능이나 정책형성기능 혹은 정책결정기능 등 구체적 속성으로 세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모든 구체적 속성들을 포괄하여 좀 더 추상적이고 종합적인 국회의 역할이나 정체성 등이 신뢰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처럼 신뢰는 A, B, X 사이의 3차원적 조합으로 형성되는 행위정향으로서, 그 외연은 무한정하다. 즉 신뢰의 종류는 무한하다.

정리하자면, 신뢰란 신뢰대상에 대한 감시나 통제 내지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신뢰대상의 어떤 특성(속성, 상태, 행위, 역할, 정체성 등)을 근거로 신뢰대상에 대해 긍정적 평가나 기대를 함으로써, 이러한 평가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취약성을 감수하고 있는 신뢰주체의 심리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약성은 궁극적으로 신뢰대상의 신뢰근거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까닭에, 간단히 말해 신뢰란 신뢰주체가 불확실성 속에서 신뢰대상의 어떤 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기대하는 심리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뢰근거로서의 이러한 특성들은 신뢰대상의 어떤 구체적인 의도, 행위, 속성 등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포괄적·종합적으로 신뢰대상의 보편적인 역할이나 정체성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신뢰란 '신뢰주체가 불확실성 속에서 신뢰대상의 어떤 역할이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혹은 기대하는 심리상태'라고 규정한다.

2. 신뢰의 유형분류

신뢰는 신뢰주체, 신뢰대상 및 신뢰근거 사이의 3차원적 조합으로 형성되는 행위정향으로서, 그 종류는 무한하다. 따라서 신뢰 관련 연구에서는 어떤 종류의 신뢰를 연구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먼저 신뢰의 종류에 대한 분류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신뢰의 유형분류는 주로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는 신뢰근거(X)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대상(B)이다.

우선, 신뢰근거에 따른 유형분류를 살펴본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Zucker(1986. 박찬웅 1999: 41-52 참조)는 신뢰의 유형을 과정의존적(process-based), 특성의존적(characterisric-based) 그리고 제도의존적(institutionally-based) 신뢰로 구분한다. 과정의존적 신뢰란 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신뢰를 지킴으로써 쌓은 평판에 근거해 형성되는 신뢰유형이다. 특성의존적 신뢰는 한 개인이 속하는 집단의 귀속적 특성, 예를 들어 가문이나 인종 등에 근거해서 형성되는 신뢰유형이다. 그리고 제도의존적 신뢰는 공식적인 제도, 예를 들어 학력이나 자격증, 법적 보증제도 등에 근거해서 형성되는 신뢰유형이다.

〈표 1〉 Zucker의 신뢰유형분류

유형	근거	근거의 예
과정의존적 신뢰	반복되는 교환	평판
특성의존적 신뢰	개인이나 집단의 귀속적 특성	가문(혈연), 인종, 성 등의 동질성
제도의존적 신뢰	공식적인 사회제도	신뢰의 보증이 되는 제도나 조직(전문인 집단, 학교, 기업, 은행, 정부 등)

출처: Zucker 1986: 60; 박찬웅 1999: 42에서 재구성.

Shapiro 등(1992. 박찬웅 1999: 41-52 참조)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의 유형을 제재의존적(deterrence-based), 지식의존적(knowledge-based) 그리고 일치감의존적(identity-based) 신뢰로 구분한다. 제재의존적 신뢰란 신뢰주체가 신뢰대상으로부터 배반당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근거해서 형성되는 신뢰유형이다. 지식의존적 신뢰란 신뢰대상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신뢰주체의 예측능력 즉 신뢰대상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근거로 형성되는 신뢰유형이다. 그리고 일치감의존적 신뢰란 신뢰주체와 신뢰대상 상호간의 일체감, 예를 들어 공동체의식, 공통의 가치나 규범 혹은 목표 등에 근거해서 형성되는 신뢰유형이다.

〈표 2〉 Shapiro 등의 신뢰유형분류

유형	근거	근거의 예
제재의존적 신뢰	제재	사회적 처벌(관계끊기, 따돌림), 법적·경제적 처벌 등
지식의존적 신뢰	신뢰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정보)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서
일치감의존적 신뢰	신뢰주체와 신뢰대상 간의 일치감	소속의식이나 집단의식

출처: Shapiro, Sheppard and Cheraskin 1992: 375; 박찬웅 1999: 48에서 재구성.

다음으로, 신뢰대상에 따른 유형분류를 살펴본다. 사회관계에서 신뢰대상은 개인이나 집단, 제도나 규범 등 매우 다양하다. Sztompka(1999: 41-46)는 기존의 대인신뢰(interpersonal trust)와 사회신뢰(social trust)의 이분법을 더욱 발전시켜, 신뢰의 유형을 구체적인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로부터 더욱 추상적인 사회적 대상(social objects)으로 단계적으로 확장되는 동심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장 좁은 범위는 강한 친밀감과 유대감이 있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신뢰이다. 다음 범위는 사적으로 알고 대면관계를 가지는 지인(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에 대한 신뢰이다. 더 넓은 범위는 같은 사회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같은 동네 사람들, 같은 공장의 피고용인들, 같은 정당의 당원들 등)에 대한 신뢰이다. 가장 넓은 범위는 어떤 공통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같은 인종·국가·나이·직업·종교 등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이다. 이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상적인 사회적 대상들에 대한 신뢰로 변해간다. 바로 이 경계선에 있는 것이 어떤 공통 속성으로 분류되는 사회적 범주(성별, 연령, 인종, 종교 등의 분류범주)에 대한 신뢰이다. 예를 들어, 남자는 신뢰하나 여자는 신뢰하지 않는다든지, 노인은 신뢰하나 젊은이는 신뢰하지 않는다든지 등등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추상적인 사회적 범주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사회적 대상의 차원에서, 그 다음으로 추상적인 단계는 사회적 역할(부모, 의사, 교수, 상인, 세무공무원, 첩보원 등 등)에 대한 신뢰이다. 다음으로 더욱 추상적인 단계는 특정한 사회적 연대에 의해 결합된 특정한 사회집단(어떤 특정한 축구팀·내각·학생회·직능집단 등)에 대한 신뢰이다. 예를 들어, 레알 마드리드 팀은 신뢰하나 첼시 팀은 신뢰하지 않는다든지, 토니 블레어 내각은 신뢰하나 마가리트 대처 내각은 신뢰하지 않는다든지 등의 경우이다. 이 보다 더욱 추상적인 단계는 사회구조적인 제도에 대한 신뢰이다. 이는 조직(학교, 교회, 행정부, 의회, 법원, 경찰, 기업 등)이나 규범적 절차(시험제

도, 소송절차, 민주주의의 절차로서 선거제도·다수결제도·대의제도 등)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다. 그 다음의 단계는 기술체계(통신체계, 교통체계, 항공관제체계, 컴퓨터 네트워크, 금융시장 등)에 대한 신뢰이다. 그리고 기술의 좀 더 실체적인 대상으로서 제품이나 도구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나 삼성스마트폰을 다른 제품 보다 더 신뢰하는 등의 경우이다. 끝으로, 가장 추상적인 단계는 사회체계나 사회질서 혹은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안전한 사회이다", "민주주의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체제이다", "시장경제는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때의 신뢰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신뢰의 동심원은 구체적인 사람들인 <가족구성원→지인→동일사회집단의 구성원→공통속성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로부터, 경계영역의 <사회적 범주>를 거쳐, 더욱 추상적인 사회적 대상인 <사회적 역할→특정한 사회집단→사회제도(사회조직과 규범)→기술체계→사회체계나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로 확장된다. Sztompka에 의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모든 유형의 신뢰의 배후에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행위에 대한 신뢰이다. 외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의 모든 신뢰대상은 인간행위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회에 대한 신뢰는 의원들, 교통체계에 대한 신뢰는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 사회나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는 사회구성원들이나 정치당국자들에 대한 신뢰를 궁극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Newton(2009)은 3가지 종류의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신뢰(social trust)와 정치신뢰(political trust)의 분류로서, 사회신뢰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 그리고 정치신뢰는 정치적 대상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그리고 대인신뢰(trust in people)와 제도신뢰(confidence in institutions)의 분류로서, 대인신뢰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제도신뢰는 제도적인 집단, 절차나 규범 혹은 체제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끝으로 특수한, 두터운 혹은 구체적 신뢰와 일반화된, 엷은 혹은 추상적인 신뢰의 분류로서, 전자는 사적이고 직접적인 지식에 근거한 개인들에 대한 신뢰 그리고 후자는 일반적인 정보에 근거한 사회집단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신뢰이다. 그러나 Newton은 이러한 3가지 종류의 분류체계를 어떻게 하나의 분류체계로 종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재혁(1998; 2006)은 Pagden(1988)의 용어를 빌어 신뢰유형을 '사적 신뢰(fede privata)'와 '공적 신뢰(fede pubblica)'로 대별하고, 사적 신뢰는 대인적 관계에서의 신뢰, 그리고 공적 신뢰는 사회 내의 제도나 규범에 대한 신뢰로 규정한다. 또한 그는(2006) 사적 신뢰를 '사회적 신뢰', 공적 신뢰를 '제도적 신뢰'로 명명하기도 한다. 이수인(2010; 2011)은 위와 같은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라는 유형분류와 개념규정을 따르면서도, 다수 연구자들은 이를 대인신뢰와 제도신뢰로 지칭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때 대인신뢰는 다시 특수신뢰와 일반신뢰로 구분되며, 특수신뢰는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 국한된 신뢰 그리고 일반신뢰는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확대된 신뢰를 뜻한다. 그리고 공적 신뢰 혹은 제도신뢰는 사회 내의 제도나 규범, 더 나아가 체제 자체에 대한 신뢰로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주요 조직이나 규범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한편, 박희봉·이희창(2009: 114)은 여러 가지 신뢰유형들에 대한 국가 간 차이를 비교조사하기 위해 신뢰유형을 먼저 협소한 신뢰, 개방적 신뢰, 그리고 제도신뢰로 대분류한다. 다음으로 협소한 신뢰는 사적 신뢰와 수직적 신뢰; 개방적 신뢰는 일반신뢰와 수평적 신뢰; 제도신뢰는 기관신뢰와 제도 공정성신뢰로

중분류한다. 그리고 끝으로, 경우에 따라, 사적 신뢰는 가족신뢰와 지인신뢰로, 일반신뢰는 일반인 신뢰와 낯선 사람 신뢰 등으로 소분류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신뢰대상에 따른 유형분류는 연구자들 사이에 공통된 용어나 분류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혼란스럽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대상에 따른 유형분류를 활용하고자 한다. 위에 소개한 Sztompka의 신뢰의 동심원을 참조해서, 아래 <표 3>에 소개하는 바와 같이 우선 신뢰의 영역을 구체적 사람들에 대한 신뢰인 대인신뢰와 정치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인 제도신뢰[3]로 구분한다. 이때 제도란, 사회적 요구로 인해 발전한 규범들, 지위와 역할들, 그리고 집단들(국가, 일차집단, 이차집단 등)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조직유형(체제, 체계)으로 이해한다(석현호·이정환·김상욱 2004: 77). 다음으로 대인신뢰는 특수(인)신뢰와 일반(인)신뢰의 유형으로 재분류하고; 제도신뢰는 정치공동체, 체제, 집단(혹은 기관), 절차(혹은 규범) 및 역할에 대한 신뢰의 5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한다.

〈표 3〉 본 연구의 신뢰유형분류

영역	유형	신뢰대상
대인신뢰	특수(인) 신뢰	잘 아는 사람(가족구성원, 친구, 동료, 이웃 등)
	일반(인) 신뢰	잘 모르는 사람(일반적 타자)
제도신뢰	정치공동체신뢰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제신뢰	정치체제(민주주의 등), 경제체제(자본주의 등), 기술체계(금융체계, 통신체계, 교통체계 등)
	집단(혹은 기관)신뢰	마을, 가정 등 일차집단; 입법부, 행정부, 기업, 노조, 언론기관 등 이차집단
	절차(혹은 규범)신뢰	선거제도, 다수결 제도, 소송절차, 위계질서, 혼인제도 등
	역할신뢰	대통령, 국회의원, 경찰, 사장, 상인, 교수, 의사 등

3. 신뢰의 기능

신뢰란 불확실성 속에서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기대하는 심리를 말한다. 개인이 생활 속에서 접촉하는 상대방을 완벽히 통찰하거나,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우정이나 애정 관계, 계약이나 거래 관계, 나아가 모든 사회관계는 다소간의 불확실성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일말의 믿음도 없다면,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은 존속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신뢰는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가정, 기업, 사회, 국가 등 단체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의 기능에 대해서는 김우택·김지희(2002)의 연구를 참고하기로 한다. 이들은 신뢰의 핵심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신뢰는 사회관계 및 인간관계의 통제기제를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서로 신뢰하지

3) Sztompka는 사회신뢰 혹은 사회적 대상에 대한 신뢰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사회'라는 용어는 대인신뢰의 인간관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제도신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못할 때 타인의 행위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신뢰가 존재할 때에는 이러한 통제 기제가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신뢰는 경제적, 정치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여준다. 신뢰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배신과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감시하고 또 배신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비용을 줄여준다.

셋째, 신뢰는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과 같은 조직형성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인 상호간에 신뢰가 구축되면 이들 간의 유대관계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상호작용의 범위 역시 확대됨으로써 각종 네트워크를 자발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넷째, 신뢰는 협력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또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상호 협력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행위 의도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통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다섯째, 신뢰는 서로의 적대감과 갈등을 해소해 주며, 위기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즉, 신뢰에 기초한 일체감과 협력의식은 위기의 내역과 그 대처방안에 대한 공통인식을 형성케 함으로써 조직의 단결성을 강화하여 위기대응능력을 높인다.

다만, 이는 신뢰의 일반적 기능이다. 그러나 신뢰의 유형은 다양하고, 다양한 유형에 따라 신뢰의 기능이 다를 수가 있다. 신뢰의 기능과 관련해 특히 논의되는 문제는 특수신뢰(특수한, 두터운 혹은 구체적 신뢰)와 일반신뢰(일반화된, 엷은 혹은 추상적인 신뢰)의 기능이다. 특수신뢰는 신뢰대상과의 사적인 긴밀한 유대를 통해 폐쇄적인 협력과 결속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배타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더 넓은 사회에는 분열의 원인이 되고 오히려 사회적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규모와 지리적 유동성이 크고, 혼합적이고 다문화적인 현대사회에서는 자기와 다른 이방인에 대한 일반신뢰가 유용한 기능을 가진다(Newton 2009; Granovetter 1973). 이와 유사하게 Fukuyama(1995)는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의 반경범위("radius of trust")가 친밀도가 강한 가족과 같은 일차집단에 머무는가(특수신뢰) 아니면 이를 넘어서 일반적인 타자에게까지 확대되는가(일반신뢰)를 기준으로, 전자를 저신뢰사회 후자를 고신뢰사회로 분류한다. 그리고 Putnam(1993a)은 일반신뢰는 민주주의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특수신뢰는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특수신뢰와 일반신뢰의 기능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더라도 여전히 한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그렇다면 특수신뢰와 일반신뢰는 상호배타적인 관계인가? Gambetta(1988)는 마피아 집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수신뢰는 해당 집단 외부의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불신감을 조장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Putnam(1993a)은 남부 이태리의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4]가 일반인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허나 특수신뢰와 일반신뢰 사이의 이러한 상호배타적인 관계는 오히려 예외의 경우일 수도 있다. 유석춘·장미혜(2003: 48-51)는 특수신뢰와 일반신뢰의 상호보완성을 주장하면서, '가족 및 개인 연결망' 활용이 일본이나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덴마크와 스웨덴은 '투명성지수'가 항상 가장 상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국가임을 예시하고; 유석춘·왕혜숙·박소연

4) Banfield(1958: 85)의 용어로서, "핵가족의 단기적인 물적 이익을 추구하고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도 그럴 것으로 가정하라"는 태도(Putnam 1993a: 88).

(2008: 254)은 "가족이나 친구를 모르는 타인과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우리는 정상적인 사회라 부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한편 Gibson(2001: 61)의 러시아 사회에 대한 분석은 특수신뢰와 일반신뢰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Putnam의 연구에서도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개인이나 가족을 국가나 전체 사회에 매개하는 수평적인 시민참여의 네트워크가 붕괴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선택으로 간주하고(Putnam 1993a: 171-185), 특수신뢰와 일반신뢰('결속형 사회자본'과 '연계형 사회자본')는 효과를 발휘하는 분야가 다르며 양자는 다양한 수준에서 서로 보완적이라고 보기도 한다(Putnam 2000. 정승현 역 2009: 601-602). Fukuyama(1995)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족을 사회자본의 여러 형태들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면서 다만 가족주의가 지나치게 팽배하여 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를 문제시하고 있다. Newton(2009: 349)에 따르면, 현대의 대규모 사회들은 필연적으로 두터운 특수신뢰를 결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에서는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서로 모르거나 혹은 공통의 사회적 배경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신뢰가 또한 중요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유석춘·왕혜숙·박소연(2008: 254)처럼, '가족이나 친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낯선 일반인을 신뢰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의식 하에, 일반신뢰와 특수신뢰는 상호보완적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대인신뢰와 제도신뢰의 기능에 대해서는 어느 유형의 신뢰의 기능이 더 근원적인가 하는 논의가 있다. 즉 대인신뢰가 제도신뢰를 증진시키는 원인인지 아니면 그 역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한 사회의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시민사회의 대인신뢰가 사회제도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Putnam 1993a; Fukuyama 1995; Inglehart 1997). 한편, 한 사회의 제도 특히 정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치제도의 작동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대인신뢰 뿐만 아니라 제도신뢰 자체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Dasgupta 1988; Coleman 1990; Hetherington 1998; Newton 2009). 이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본 연구자는 Sztompka의 입장에 비추어, 다만 논리적으로는 대인신뢰가 근원이라고 본다. Sztompka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제도신뢰의 배후에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인간과 인간행위에 대한 신뢰이다. 즉, 모든 유형의 제도신뢰는 궁극적으로 대인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신뢰는 대인신뢰의 한 유형인 일반신뢰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것이다.

어쨌든, 대인신뢰와 제도신뢰 사이의 이러한 영향관계 내지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의 배경에는 양자의 관계가 긍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관관계는 영향관계 내지 인과관계가 형성되기 위한 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나 지역에 따라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이들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Brehm and Rahn(1997)은 미국의 GSS(General Social Survey)의 1972-94년의 누적자료 분석을 통해 대인신뢰와 국가기관신뢰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있고; 박병진(2007: 92)은 한국의 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대인신뢰, 사회신뢰(사회공동체신뢰-필자 주), 국가기관신뢰, 언론기관신뢰, 교육기관신뢰, 대기업신뢰, NGO신뢰 사이에는 모두 유의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이재혁(2006: 73)은 한국의 KGSS(Korean General Social Survey)와 미국의 GSS 자료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대인신뢰와 제도신뢰(정부기관 및 주요 사회기

관에 대한 신뢰) 사이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이재혁(1998)은, Misztal (1996)의 연구를 참고하여 기존의 대다수 연구에서 신뢰는 다다익선식의 정합적(positive-sum) 개념으로만 다루어졌었다고 비판하면서, 대인신뢰와 제도신뢰 사이에는 '사회적 균형'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직 대인신뢰와 제도신뢰 사이의 정합성 문제만을 실증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조사연구방법

위의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제 경험적 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 신뢰유형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신뢰수준을 파악하고, 신뢰유형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며, 나아가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조사대상변수와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과 분석방법 등을 소개한다.

1. 변수의 선정과 측정방법

조사연구를 위해 우선 제기되는 문제는 어떠한 신뢰대상을 조사범위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신뢰수준을 어떻게 측정하며, 나아가 이러한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어떠한 독립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다.

1) 신뢰대상

아래 <표 4>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조사에 포함할 신뢰대상의 범위는 대인신뢰 영역 및 제도신뢰 영역을 포괄한다. 대인신뢰는 특수신뢰와 일반신뢰의 2개 유형으로 분류되는바, 특수신뢰의 조사대상으로서 가족, 친구, 직장이나 학교 등의 동료, 이웃 등 4가지; 일반신뢰의 조사대상으로는 처음 만난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 등 5가지를 선정했다. 한편, 제도신뢰는 정치공동체신뢰, 체제신뢰, 절차(혹은 규범)신뢰 및 집단(혹은 기관)신뢰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치공동체신뢰의 대상은 국가공동체(한국)와 지역공동체(부산) 2가지; 체제신뢰의 대상은 민주주의체제 1가지; 절차신뢰의 대상은 공직선거 4가지(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단체장선거, 지방의원선거); 그리고 집단신뢰의 대상은 중앙공공기관 7가지(청와대, 중앙행정부처, 국회, 법원, 경찰서, 군대, 정당), 지역공공기관 6가지(시청, 시의회, 구청, 구의회, 교육청, 동주민센터) 및 사회집단 6가지(언론기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노동조합, 시민단체, 대기업)를 선정했다. 이리하여 2개 영역, 6개 유형의 35개 신뢰대상이 조사에 포함된다. 특히 이러한 신뢰대상의 선정은 가능한 한 세계가치조사의 설문서에 설정된 동일한 대상을 선정해서, 조사결과의 비교를 하고자 했다.

〈표 4〉 조사대상 2개 신뢰영역, 6개 신뢰유형 및 35개 신뢰대상

영역	유형	신뢰대상
대인 신뢰	특수(인) 신뢰	가족, 친구, 직장이나 학교 등의 동료, 이웃
	일반(인) 신뢰	처음 만난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
제도 신뢰	정치공동체신뢰	국가공동체(한국)와 지역공동체(부산)
	체제신뢰	민주주의
	집단(혹은 기관) 신뢰	중앙공공기관(청와대, 중앙행정부처, 국회, 법원, 경찰서, 군대, 정당)
		지역공공기관(시청, 시의회, 구청, 구의회, 교육청, 동주민센터)
		사회집단(언론기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노동조합, 시민단체, 대기업)
	절차(혹은 규범) 신뢰	선거제도(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단체장선거, 지방의원선거)

2) 측정방법

35개 신뢰대상에 대한 응답자의 신뢰수준은 다음의 2가지 방법으로 측정한다. 첫째, 신뢰대상의 어떤 구체적인 특성이 아니라 모든 특성들을 아울러 신뢰대상에 대해 형성하는 포괄적인 신뢰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즉, 신뢰대상의 일반적인 역할이나 정체성에 대해 신뢰주체가 나름대로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신뢰수준 그 자체를 측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을 위한 설문은 '(어떤 신뢰대상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을 쓰기로 한다. 둘째, 이러한 표현으로 설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작적인 표현을 쓰기로 한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신뢰대상은 국가공동체, 지역공동체, 민주주의체제, 선거 등 4가지이다. 예를 들어, '가족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국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물음은 그리 애매하지 않지만,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혹은 '민주주의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설문은 너무 막연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공동체 및 지역공동체에 대해서는 각각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는바, 따라서 측정에 포함된 신뢰대상은 35개이나 측정문항은 39개가 된다. 그리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신뢰대상의 명칭을 그대로 변수명으로 사용한다. 35개 신뢰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국가공동체(국가와 국민) 및 지역공동체(지역과 주민)

국가공동체나 지역공동체란 정치적 혹은 행정적으로 획정된 구역과 이에 속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들은 제도신뢰의 대상이다. 이러한 국가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신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종류의 설문을 선정했으며, 응답지는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설정했다.

-"대체적으로 보아 한국(혹은 부산)은 태어나서 살아갈 만한 나라(지역)라고 생각한다."[변수명: 한국생활, 부산생활]

-"나는 한국(혹은 부산)이 자랑스럽다."[변수명: 한국자긍심, 부산자긍심]

-"대체적으로 보아 한국인(혹은 부산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변수명: 한국인신뢰, 부산인신뢰]

② 민주주의체제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신뢰의 측정은 "우리나라는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이들에게 국가의 통치를 맡기는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는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다.

③ 선거

선거는 공정성과 대표성을 기본원리로 한다. 이를 감안해 선거에 대한 신뢰의 측정은 "선거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표자를 뽑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래 우리나라의 각종 공직선거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표자를 뽑고 있다고 믿으십니까?"라는 설문 하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단체장(시장·구청장)선거 및 지방의원(시·구의원)선거를 제시하고, 모두 리커트 형 4점 척도로 측정한다.

④ 기타

대인신뢰 영역의 전체 9가지 대상, 제도신뢰 영역의 7가지 중앙공공기관, 6가지 지역공공기관 및 6가지 사회집단에 대해서는,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혹은 집단이나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리커트 형 4점 척도로 측정한다.

3) 신뢰의 영향요인

신뢰란 신뢰주체가 불확실성 속에서 신뢰대상의 어떤 역할이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혹은 기대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수히 많을 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배경, 사회적 배경, 경제적 배경, 정치적 배경 등 4가지 범주의 변수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배경에 주목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상태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Inglehart(1990: 43)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는 타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광범위한 태도 증후군(a broad syndrome of attitudes)의 일부이다. 한편, 연령이나 성별,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SES)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사회적 대상들에 대한 태도인 신뢰에도 역시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배경은 특히 정치적 신뢰대상과 관련하여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신적·육체적 변수로는 건강상태 및 삶의 만족도 2가지, 사회적 변수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등 4가지, 경제적 변수로는 가구의 월평균 수입 1가지, 그리고 정치적 변수로는 정치관심도, 정당성향 및 이념성향(진보-보수) 3가지 등 모두 10개의 독립변수를 신뢰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2. 자료수집방법

조사대상 지역은 부산광역시를, 표본추출은 할당법을, 자료수집은 설문지의 배포수거방법을 택했다. 우선, 20세 이상 부산시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전체 표본수를 1,240명으로 정하고 이를 부산시 16개 구·군(15개구, 1개군)에 인구비례로 할당하였다. 다음, 인구비례에 따라 각 구·군별로 1-4개 동씩 모두 31개 동을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각 동에서 1개통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각 통별로 40명씩을 연령별·성별로 동일한 수의 표본을 할당하였다.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해당 동장의 협조하에 해당 통장을 만나 조사방법을 교육한 후, 통장들이 성별·연령별 할당비율에 의거 자기 통의 주민을 임의로 선정하여 설문서를 배포한 후 수거하도록 했다. 2013년 6월 5일-7월5일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율이 낮거나 할당비율이 왜곡된 지역에 한해 7월 22일-31일 추가조사를 하였다. 이리하여 회수된 전체 설문지 1,235매 중 답변이 부실한 31매를 제외하고 1,204매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3. 분석방법

1) 요인분석: 신뢰의 유형분류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인신뢰와 제도신뢰 관련 39개의 모든 측정항목들을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뒤 추출된 요인에 따라 신뢰유형을 분류하고, 다음으로 각 신뢰유형별 신뢰현황을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하기로 한다. 39개의 측정항목들 중 7개 항목은 5점 척도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은 4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어, 측정척도를 표준화하여 요인분석을 시행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들 중 '대기업'과 '군대'가 이론상 이질적인 집락에 묶여 이를 제외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아래 <표 5>에서 보듯이 나머지 37개 측정항목들은 고유값 1 이상의 8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한편 KMO(Kaiser-Meyer-Olkin) 척도값은 .911로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의 선정은 매우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요인을 그 유형(성분)에 따라 중앙공공기관신뢰, 지역공공기관신뢰, 공동체신뢰, 일반신뢰, 선거신뢰, 사회단체신뢰, 특수신뢰, 교육기관신뢰로 명명한다. 다만, 민주주의 항목은 선거신뢰 요인에 묶였으나 성격상 이를 민주주의신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공동체신뢰는 6가지 측정항목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으나 이를 국가공동체신뢰와 지역공동체신뢰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따라서 분석대상인 신뢰유형은 사실상 10가지가 된다.

〈표 5〉 37개 항목 요인분석 결과

성분 / 항목(변수명)	중앙공공기관신뢰	지역공공기관신뢰	공동체신뢰	일반신뢰	선거신뢰	사회단체신뢰	특수신뢰	교육기관신뢰	신뢰계수 α
국회	.763	.232	.151	.065	.214	.212	.038	-.133	.888
중앙행정기관	.761	.266	.129	.143	.148	-.063	.092	.188	
청와대	.713	.257	.156	.035	.194	-.221	.092	.236	
정당	.674	.236	.142	.153	.214	.323	-.007	-.121	
법원	.669	.268	.107	.070	.184	.181	.033	.265	
경찰	.594	.296	.130	.048	.140	.201	.065	.309	
언론기관	.465	.176	.099	.121	.079	.374	-.033	.360	
구청	.232	.806	.119	.127	.123	-.007	.075	.205	.901
부산시청	.342	.749	.182	.106	.121	-.030	.058	.163	
부산교육청	.289	.722	.181	.091	.138	.247	.061	.060	
동주민센터	.093	.719	.134	.051	-.021	-.053	.147	.348	
부산시의회	.375	.698	.171	.080	.244	.239	.063	-.097	
구의회	.278	.692	.149	.099	.218	.323	.073	-.128	
한국자긍심	.103	.120	.771	.052	.069	-.005	.037	.093	.739
한국생활	.097	.120	.707	.040	.084	-.051	.089	.120	
한국인신뢰	.178	.018	.708	.117	.120	.091	.154	-.045	
부산자긍심	.063	.167	.796	-.002	.078	.079	.019	-.015	.757
부산생활	.020	.149	.747	-.016	.059	.040	.033	.040	
부산인신뢰	.099	.056	.737	.151	.114	.090	.096	-.010	
타종교인	.060	.075	.043	.843	.073	.025	.100	.091	.885
타정견인	.093	.100	.039	.841	.100	.080	.093	.097	
타지인	.014	.062	.046	.828	.041	.125	.110	.081	
타국인	.043	.045	.046	.825	-.028	.107	.018	-.011	
초면인	.155	.085	.129	.683	.038	.065	.208	-.053	
단체장선거	.120	.178	.123	.039	.880	.153	.051	-.004	.879
국희의원선거	.234	.074	.100	.088	.848	-.012	.092	.061	
지방의원선거	.105	.197	.110	.043	.830	.255	.008	-.055	
대통령선거	.238	.128	.122	.021	.686	-.270	.099	.206	
민주주의	.191	-.004	.322	.086	.416	-.095	.061	.063	-
노조	.159	.136	.071	.165	.027	.803	.048	.159	.855
시민단체	.116	.110	.056	.202	.018	.782	.082	.193	
친구	.040	.049	.096	.161	.065	.116	.791	-.005	.686
가족	-.041	.085	.047	-.027	.001	-.014	.696	.096	
이웃	.161	.116	.149	.249	.109	-.061	.591	.029	
동료	.070	.042	.137	.399	.100	.128	.569	.029	
초중고	.245	.260	.081	.114	.067	.277	.134	.726	.835
대학	.330	.237	.103	.131	.133	.354	.089	.629	
고유값	4.139	4.035	3.858	3.782	3.313	2.371	2.030	1.741	-
설명된 분산(%)	11.187	10.907	10.428	10.222	8.953	6.408	5.485	4.706	-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2) 회귀분석: 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10가지 신뢰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이들 각각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선정된 10가지 영향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10개의 회귀모형을 통해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회귀분석시, 명목척도인 성별과 정당성향은 각각 여성과 여당성향을 기준범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며, 각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은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절편, 회귀계수 생략).

각 유형별 신뢰 = 연령+성별더미+교육수준+가구 월수입+주관적 계층의식+건강상태+삶의 만족도+정치관심+야당성향더미+무당파성향더미+이념성향+ε

Ⅳ. 조사결과 분석

1. 부산시민의 신뢰현황

아래 <표 6>을 통해 우선 부산시민들의 신뢰유형별 신뢰수준을 백분위 평균값을 통해 살펴보면, 특수신뢰(71.25)-국가공동체신뢰(66.83)-지역공동체신뢰(66.52)-민주주의체제신뢰(63.5)-교육기관신뢰(54.84)-선거신뢰(54.58)-지역공공기관신뢰(53.66)-중앙공공기관신뢰(46.95)-사회단체신뢰(44.66)-일반신뢰(44.27)의 순으로 신뢰수준이 높다. 특기할 점은 대인신뢰의 두 유형인 특수신뢰와 일반신뢰의 수준이 양 극단을 차지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유형의 제도신뢰의 수준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가장 높은 신뢰수준을 100, 중간수준을 50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을 0으로 볼 때, 특수신뢰, 국가공동체신뢰, 지역공동체신뢰 및 민주주의체제신뢰의 수준이 높은 편이며, 교육기관신뢰, 선거신뢰 및 지역공공기관신뢰의 수준이 중간 정도이고, 중앙공공기관신뢰, 사회단체신뢰 및 일반신뢰의 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서는 신뢰수준에 대한 상대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교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세계가치조사(WVS)의 관련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소개하고자한다. 세계가치조사의 가장 최근의 6번째 주기조사 결과는 현재 발표되지 않고 있어, 5번째 주기조사(2005-2006 Wave)의 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국 그 조사 당시가 비교시점이 되나, 다만 7-8년 사이에 국가 차원의 평균적 신뢰수준의 변화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한다. 한편, 분석대상 국가는 한국, 대만, 일본, 독일(서독 지역) 및 미국 5개국을 선정했다. Fukuyama(1995)는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의 반경범위("radius of trust")를 기준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이나 중국계 국가들을 저신뢰사회로, 그리고 일본과 독일을 고신뢰사회로 규정하는 한편 미국은 고신뢰사회의 전통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Fukuyama가 저신뢰사회로 분류한 한국과 대만, 고신뢰사회로 분류한 일본과 독일, 그리고 고신뢰사회의 전통이 약화되고 있다는 미국 등 5개국을 분석대상 국가로 선정했다.

아래에서는 우선 본 연구자의 부산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신뢰유형별 신뢰수준의 특성을 분석한 뒤, 세계가치조사의 관련 문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석해 비교한다.

〈표 6〉 신뢰현황: 부산시 및 WVS 조사결과 분석

부산시 조사결과(2013)				WVS 조사결과(2005-2006)						
유형변수		항목(변수명)	평균	변수	한국	대만	일본	독일	미국	F
대인신뢰	특수신뢰	가족	89.67	V125	95.67	95.33	-	92.33	90.33	39.266*
		이웃	62.67	V126	58.67	64.0	-	61.33	63.33	16.759*
		친구	72.0	V127	65.67	70.33	-	73.0	75.33	59.854*
		동료	60.67							
		(유형평균)	71.25		73.34	76.55	-	75.55	76.33	11.697*
	일반신뢰	초면인	37.33	V128	29.0	35.33	-	36.67	43.33	86.220*
		타종교인	46.33	V129	45.0	47.0	-	45.67	61.67	151.675*
		타정견인	45.33	-	-	-	-	-	-	
		타지인	49.67	-	-	-	-	-	-	
		타국인	42.67	V130	37.67	38.33	-	45.33	59.33	242.118*
		(유형평균)	44.27		37.22	40.22	-	42.56	54.78	156.990*
제도신뢰	국가공동체 신뢰	한국자긍심	72.0	V209	68.33	54.67	60.0	61.67	86.0	277.981*
		한국생활	67.5	-	-	-	-	-	-	
		한국인신뢰	61.0	-	-	-	-	-	-	
		(유형평균)	66.83	-	-	-	-	-	-	
	지역공동체 신뢰	부산자긍심	67.5	-	-	-	-	-	-	
		부산생활	69.25	-	-	-	-	-	-	
		부산인신뢰	62.8	-	-	-	-	-	-	
		(유형평균)	66.52		-	-	-	-	-	
	체제신뢰	민주주의	63.5	V151	66.0	75.33	74.0	86.33	77.0	104.566*
	선거신뢰	대통령선거	66.33	-	-	-	-	-	-	
		국희의원선거	54.67	-	-	-	-	-	-	
		단체장선거	50.33	-	-	-	-	-	-	
		지방의원선거	47.0	-	-	-	-	-	-	
		(유형평균)	54.58		-	-	-	-	-	
	중앙공공 기관신뢰	청와대	55.0	-	-	-	-	-	-	
		중앙행정기관	50.0	V138	47.0	38.67	38.0	37.33	44.0	32.607*
		국회	38.67	V140	35.67	24.33	34.33	36.67	35.67	59.143*
		법원	49.33	V137	48.67	41.67	65.67	55.67	54.0	145.727*
		경찰	52.0	V136	53.0	43.0	57.0	64.67	62.33	150.546*
		정당	37.0	V139	34.0	22.67	31.33	30.33	34.0	52.390*
		언론기관	46.67	V133-4	55.0	29.0	59.33	43.0	37.0	462.413*
		(유형평균)	46.95		45.56	33.22	47.61	44.61	44.50	127.333*
	지역공공 기관신뢰	부산시청	57.0	-	-	-	-	-	-	
		부산의회	47.0	-	-	-	-	-	-	
		부산교육청	50.0	-	-	-	-	-	-	
		구청	57.33	-	-	-	-	-	-	
		구의회	46.33	-	-	-	-	-	-	
		동주민센터	64.33	-	-	-	-	-	-	
		(유형평균)	53.66							
	교육기관 신뢰	초중고	57.0	-	-	-	-	-	-	
		대학	52.67	-	-	-	-	-	-	
		(유형평균)	54.84		-	-	-	-	-	
	사회단체 신뢰	노조	43.33	V135	45.0	37.0	42.67	39.33	38.67	21.773*
		시민단체	46.0	V143-5	58.0	53.0	45.33	54.67	52.33	53.887*
		(유형평균)	44.66		51.50	45.0	44.0	47.0	45.50	30.775*

* p<.001

1) 대인신뢰

(1) 특수신뢰

부산시민의 특수신뢰는 가족, 이웃, 친구, (직장이나 학교 등의) 동료 등 4가지 신뢰대상에 대한 신뢰도의 산술평균을 통해 측정했으며, 평균값은 100점 만점에 71.25점으로 측정대상인 10가지 신뢰유형 중에서 가장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89.67)에 대한 신뢰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친구(72.0)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으며, 이웃(62.67)이나 동료(60.67)에 대한 신뢰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즉 사적인 친밀도가 높은 대상일수록 신뢰수준이 높다.

(2) 일반신뢰

일반신뢰는 5가지 종류의 이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의 산술평균을 통해 측정했으며 (아래에서의 서술의 편의를 위해 이를 '이질적 일반인 척도'라고 부르기로 함), 평균값은 44.27점으로서 측정대상 10가지 신뢰유형 중에서 가장 낮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 보는 사람(37.33)에 대한 신뢰수준이 가장 낮고, 이어서 다른 나라 사람(42.67),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45.33),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46.33), 출신지역이 다른 사람(49.67)의 순으로 신뢰수준이 낮다.

특수신뢰의 경우와 함께 비교해보면 가족(89.67)-친구(72.0)-이웃(62.67)-동료(60.67) 그리고 타지인(49.67)-타종교인(46.33)-타정견인(45.33)-타국인(42.67)-초면인(37.33)의 순으로 신뢰수준이 낮아진다. 어쨌든, 부산시민들의 특수신뢰의 평균수준은 71.25점으로 매우 높은 반면 일반신뢰의 평균수준은 44.27점으로 낮은바, Fukuyama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부산은 저신뢰사회의 범주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 혹은 국가의 특수신뢰와 일반신뢰의 수준은 어떠한가?

(3) 대인신뢰의 지역간 비교

위 <표 6>의 'WVS 조사결과(2005-2006)' 난에서 보듯이, 우선 특수신뢰의 수준(유형평균)은 대만 76.55, 미국 76.33, 독일 75.55, 한국 73.34점이다. 즉 분석대상 국가들에 있어서 특수신뢰의 수준은 보편적으로 높으며, 상대적으로 보아 한국이 다른 나라들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성은 있으나 그리 큰 차이는 아니다($F=11.697$, $p<.001$). 한편, 부산의 특수신뢰의 수준(71.25)은 한국사회 평균(73.34)에 비해 조금 낮다. 어쨌든 특수신뢰의 수준은 국가나 지역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음으로, 위의 '이질적 일반인 척도'로 측정한 일반신뢰의 수준(유형평균)은 미국 54.78, 독일 42.56, 대만 40.22, 한국 37.22의 순으로 높다. 즉 일반신뢰의 수준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비해 독일, 대만, 한국은 낮은 편이다. 그리고 특수신뢰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신뢰의 이러한 국가간 차이는 매우 크다($F=156.990$, $p<.001$). 한편, 부산의 일반신뢰수준은 44.27점으로서 독일보다도 높다.[5] Fukuyama는 독일을 고신뢰사회로 그리고 미국은 고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사회로 규정하고

5) 부산발전연구원에서 2007년에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이미지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부산시민들은 부산의 도시이미지를 평가하는 20가지 형용사 중에서 '개방적'이라는 항목에 가장 높은 0.78점을 부여하고 있다(부산발전연구원 2007). 항구도시로서 부산의 개방성은 부산시민의 일반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개

있으나,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신뢰사회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미국은 그야말로 다문화사회인 까닭에 종교나 출신지 혹은 국적이 다른 일반적인 타자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허나, 측정도구의 문제가 남아있다. Putnam(2000. 정승현 옮김. 2009: 223)도 언급하듯이 사회조사에서 일반신뢰의 측정척도로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세계가치조사의 아래의 측정문항이다. 이 문항은 "일반적으로 말해, 인간관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Generally speaking, would you say that most people can be trusted or that you need to be very careful in dealing with people?)"라고 질문하고 있다. 그리고 응답지로서는 '1.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Most people can be trusted)' 및 '2. 매우 조심해야 한다(Need to be very careful)'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측정문항의 보편적 활용도를 감안해 본 조사연구의 설문지에도 이 문항을 설정했으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여기에서 별도로 분석,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이 문항(서술의 편의를 위해 '신뢰-조심 척도'로 칭하기로 함)에 의한 측정결과의 해석은 두 가지 주의를 요한다. 첫째는 측정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설문의 '대부분의 사람들(most people)'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타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등 친밀한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즉 일반신뢰 뿐만 아니라 특수신뢰를 포괄하는 대인신뢰를 측정하고 있다. 둘째는 측정수준의 문제로서, 한국의 조사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가 아니라 '조심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6] '조심해야 한다'는 표현은 매우 조심과 어느 정도 조심의 태도수준을 포괄하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보다 응답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신뢰('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의 응답률은 낮아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세계가치조사의 측정결과를 아래 <표 7>에 의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뢰-조심 척도'로 측정한 일반신뢰의 수준은 독일 40.8, 미국 39.6, 일본 39.1, 한국 30.2, 대만 24.2의 순으로 높다. 그리고 세계가치조사의 한국어 설문서와 동일한 설문과 응답지를 사용한 본 연구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은 26.2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측정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독일, 미국, 일본의 일반신뢰수준이 높고, 한국, 대만, 부산의 수준이 낮다. 그러나 절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모든 지역의 일반신뢰수준은 중간값 50에도 많이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서 저신뢰사회로 분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신뢰-조심 척도'에 의한 측정치로서도 고신뢰-저신뢰 사회를 구분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어쨌든, 추후 본 연구에서의 일반신뢰에 대한 분석은 '이질적 일반인 척도'의 측정결과를 사용한다.

연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이를 검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6) 제5주기(2005-2006) 세계가치조사의 한국어 설문지의 설문과 응답지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한다고 보십니까? 1. 대부분 믿을 수 있다. 2.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한국인의 삶과 가치변화에 관한 연구 조사설문지". 2005년 11월. 조사책임자: 어수영, 남궁곤, 이남영. http://www.worldvaluessurvey.org)

〈표 7〉 '신뢰-조심 척도'의 일반신뢰 수준

단위: %(명)

	부산조사(2013)	WVS조사(2005-2006)				
	부산	한국	대만	일본	독일	미국
믿을 수 있다	26.2(313)	30.2(357)	24.2(297)	39.1(401)	40.8(359)	39.6(491)
조심해야 한다	73.8(881)	69.8(827)	75.8(928)	60.9(625)	59.2(521)	60.4(750)
합계	100(1194)	100(1184)	100(1225)	100(1026)	100(880)	100(1241)

2) 제도신뢰

(1) 국가공동체신뢰

국가공동체신뢰는 한국에 대한 자긍심,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평가, 한국인에 대한 신뢰 등 3가지 문항을 통해 측정했는바, 그 측정치는 각각 72.0, 67.5, 61.0점으로서 평균 66.83점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가치조사에서는 오직 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대한 문항이 설정되어 있는데, 분석결과 미국 86.0, 한국 68.33, 독일 61.67, 일본 60.0, 대만 54.67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한국에 대한 자긍심은 부산시민들(72.0)이 한국인 평균(68.33) 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2) 지역공동체신뢰

지역공동체신뢰는 부산에 대한 자긍심, 부산에서의 삶에 대한 평가, 부산사람에 대한 신뢰 등 3가지 문항을 통해 측정했는바, 그 측정치는 각각 67.5, 69.25, 62.8점으로서 평균 66.52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신뢰 주준(66.52)은 국가공동체신뢰 수준(66.83)과 거의 동일하다. 백분위의 중간값 50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국가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신뢰수준은 어느 정도 높은 편이다.

(3) 민주주의체제신뢰

민주주의체제신뢰는 대의민주주의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측정했던바, 부산시민들의 신뢰수준은 63.5점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세계가치조사의 유사한 문항에 대한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독일 86.33, 미국 77.0, 대만 75.33, 일본 74.0, 그리고 한국이 66.0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부산(63.5)의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신뢰수준은 한국(66.0)과 비슷하고, 이들 두 지역은 분석대상인 여타 지역 보다 낮은 편이다.

(4) 선거신뢰

선거신뢰는 4가지 종류의 공직선거에 대한 신뢰도의 산술평균을 통해 측정했으며, 그 값은 54.58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66.33)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고, 국회의원선거(54.67)와 단체장선거(50.33)가 그 뒤를 이으며, 지방의원선거(47.0)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다.

(5) 중앙공공기관신뢰

중앙공공기관신뢰는 7가지 주요 중앙공공기관들에 대한 신뢰도의 산술평균을 통해 측정했으며, 그 값은 46.95점으로 중간값 보다 약간 낮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당(37.0)과 국회(38.67)에 대한 신뢰수준이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는 언론기관(46.67), 법원(49.33) 및 중앙행정부처(50.0)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다. 그리고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찰(52.0)과 청와대(55.0)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은 편이다. 특기할 점은 정당과 국회에 대한 신뢰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분석에 포함된 모든 신뢰대상 중에서 제일 낮은바, 처음 보는 사람(초면인)에 대한 신뢰도(37.33) 보다도 낮다.

한편 세계가치조사에서도 대통령실(청와대)을 제외하고 본 조사에서와 같은 6가지 중앙공공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그 평균값을 살펴보면 일본 47.61, 독일 44.61 미국 44.50, 한국 45.56점으로 유사하고, 대만이 33.22점으로 가장 낮다. 부산의 경우, 청와대를 제외한 6가지 중앙기관에 대한 신뢰의 평균은 45.61로서 한국 평균 수준(45.56)과 거의 동일하다.

(6) 지역공공기관신뢰

지역공공기관신뢰는 6가지 주요 지역공공기관들에 대한 신뢰도의 산술평균을 통해 측정했으며, 그 값은 53.66점으로 중간값 보다 약간 높다. 구체적으로 구의회(46.33) 및 시의회(47.0)에 대한 신뢰수준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는 부산시교육청(50.0)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다. 그러나 시청(57.0)과 구청(57.33) 그리고 동주민센터(64.33)에 대한 신뢰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점은, 중앙공공기관신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수준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공공기관신뢰도는 중앙공공기관신뢰도 보다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이 중앙공공기관 보다는 지역공공기관을 자주 접촉하여 친밀감이 높은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정치적·행정적 거리감 가설. 정광호 2011: 156).

(7) 교육기관신뢰

교육기관신뢰는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대한 신뢰도의 산술평균을 통해 측정했으며, 그 값은 54.84점으로 중간값 보다 약간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중고(57.0)에 대한 신뢰수준이 대학(52.67)에 대한 신뢰수준 보다 높다.

(8) 사회단체신뢰

사회단체신뢰는 노조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의 산술평균을 통해 측정했으며, 그 값은 44.66점으로 낮은 편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조가 43.33, 시민단체가 46.0점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가치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노조에 대한 신뢰수준은 미국 38.67, 독일 39.33, 일본 42.67, 대만 37.0, 그리고 한국이 45.0이다. 부산시민들의 노조에 대한 신뢰수준(43.33)은 한국인 평균(45.0)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시민단체는 사실상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포괄적으로 '시민단체'라는 명목으로 측정했다. 그러나 세계가치조사에서는 이들을 구별하여 환경단체, 여성단체, 인권·자선단체

등 3가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를 묻고 있다. <표 6>의 'WVS조사결과(2005-2006)' 난의 '시민단체' 항목에는 이들 3가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의 산술평균값을 소개해두었다. 이를 살펴보면, 미국(45.50), 독일(47.0), 일본(44.0) 및 대만(45.0)이 서로 유사한 수준이고, 한국(51.50)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부산(46.0)은 한국 보다는 낮으나 여타 국가와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3) 신뢰유형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앞의 제II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특수신뢰와 일반신뢰, 그리고 대인신뢰와 제도신뢰의 관계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 혹은 영향관계의 문제는 차치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만 이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래 <표 8>에서 보듯이, 분석대상인 전체 10가지 신뢰유형들 사이에는 예외 없이 모두 유의수준 .05 혹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신뢰와 제도신뢰를 포괄하는 10가지 신뢰유형들은 서로서로 선형적인 연관관계, 즉 어떤 한 유형의 신뢰수준이 증가하면 다른 유형의 신뢰수준도 증가하는 관계에 있다. 이는 적어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모든 신뢰유형들은 상호배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허나 이러한 결과는 오직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연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소개한 Brehm and Rahn(1997), 박병진(2007), 그리고 이재혁(2006)의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연구 역시 대인신뢰와 제도신뢰의 유형들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한 사회의 신뢰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즉, 이러한 사회에서는 특수신뢰를 위시하여 모든 유형의 신뢰는 다다익선일 수가 있다.

〈표 8〉 신뢰유형들 간의 상관분석

	특수 신뢰	일반 신뢰	국가 공동체 신뢰	지역 공동체 신뢰	민주주의신뢰	중앙공 공기관 신뢰	지역공 공기관 신뢰	선거 신뢰	사회단 체신뢰
일반신뢰	.424**	1							
국가공동체신뢰	.306**	.193**	1						
지역공동체신뢰	.257**	.154**	.739**	1					
민주주의신뢰	.187**	.141**	.312**	.302**	1				
중앙공공기관신뢰	.241**	.298**	.354**	.302**	.288**	1			
지역공공기관신뢰	.283**	.273**	.343**	.336**	.237**	.684**	1		
선거신뢰	.236**	.173**	.286**	.268**	.409**	.480**	.433**	1	
사회단체신뢰	.175**	.317**	.128**	.141**	.074*	.388**	.377**	.165**	1
교육기관신뢰	.264**	.285**	.243**	.211**	.182**	.599**	.520**	.285**	.461**

* p<.05 ** p<.01

4) 요약

신뢰유형별로 신뢰수준의 특징적인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인신뢰 영역에서, 부산시민의 특수신뢰의 수준은 100점 만점에 71.25점으로 분석대상인 10가지 신뢰유형 중에서 가장 높다. 그런데 세계가치조사의 자료분석을 통해 국가별 특수신뢰의 수준을 살펴보면 대만 76.55, 미국 76.33, 독일 75.55, 한국 73.34점으로서 모두 70점대를 기록하고 있어, 특수신뢰의 수준은 지역별 큰 차이 없이 대체로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가운데 오히려 부산은 상대적으로 얼마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일반신뢰의 수준은 '이질적 대상 척도'의 측정결과에 따르면 부산은 44.27점이며, 국가별로는 미국 54.78, 독일 42.56, 대만 40.22, 한국 37.22점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신뢰의 수준은 지역을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낮은 가운데, 지역별 편차가 크다. 부산은 미국 보다는 낮으나 여타 지역 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도신뢰 영역에서, 국가공동체(66.83)나 지역공동체(66.52)에 대한 부산시민의 신뢰수준은 어느 정도 높은 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체제(63.5)에 대한 부산시민의 신뢰수준도 어느 정도 높은 편이기는 하나, 국가 차원에서 독일 86.33, 미국 77.0, 대만 75.33, 일본 74.0, 한국 66.0점임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다. 한편, 교육기관(54.84), 선거(54.58) 및 지역공공기관(53.66)에 대한 신뢰수준은 중간 정도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중앙공공기관(46.95) 및 사회단체(44.66)에 대한 신뢰수준은 낮은 편이다. 중앙공공기관의 경우, 대통령실(청와대)을 제외한 6가지 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균은 일본 47.61, 독일 44.61 미국 44.50, 한국 45.56, 대만 33.22이며, 부산은 45.61로서 한국 평균 수준과 거의 동일하다. 사회단체의 경우, 노조에 대한 신뢰도는 미국 38.67, 독일 39.33, 일본 42.67, 대만 37.0, 한국 45.0, 그리고 부산은 한국과 비슷한 43.33점이고;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미국 45.50, 독일 47.0, 일본 44.0, 대만 45.0, 한국 51.50, 그리고 부산은 46.0점으로서 한국 보다는 낮으나 여타 국가와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10가지 신뢰유형 각각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주요 영향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10개의 회귀모형 분석을 통해,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로,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은 성별더미, 연령, 교육수준, 가구의 월평균 수입, 주관적 계층의식,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정치관심, 이념성향, 정당성향의 야당성향더미와 무당파성향더미 등 모두 11가지이다. 10가지 회귀모형의 검정통계량(F)은 모두 유의확률 $p<.00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들로 판명되었으며,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래 <표 9>에 제시한 결정계수(R^2) 및 표준회귀계수(베타)를 중심으로 각 신뢰유형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 소개한다.

〈표 9〉 신뢰유형별 영향요인 분석

종속변수 / 독립변수	특수 신뢰	일반 신뢰	국가 공동체 신뢰	지역 공동체 신뢰	민주 주의 신뢰	선거 신뢰	중앙공 공기관 신뢰	지역공 공기관 신뢰	사회 단체 신뢰	교육 기관 신뢰
성별(여성=0)	.008	-.037	-.065*	-.082**	.008	-.008	-.065*	-.056	-.059	-.020
연령	.008	.043	.083*	-.040	.025	-.018	.019	.018	-.065	.062
교육수준	.006	.043	-.099**	-.081*	-.025	-.061	-.089*	-.077*	-.042	-.046
가구월수입	.043	.119**	-.125***	-.113**	-.032	-.052	-.076*	-.070*	.019	.008
주관적 계층	.039	.067	.088**	.078*	.000	.058	.102**	.086*	.018	.080*
건강상태	.118***	.023	.134***	.089**	.050	.086**	.094**	.098**	.085**	.073*
삶의 만족도	.159***	.078*	.318***	.314***	.095**	.060	.120***	.142***	.048	.076*
정치관심	.058	.106**	.063*	.086**	.109**	.028	.057	.047	.094**	.094**
야당성향	-.010	-.077*	-.139***	-.105**	-.080*	-.159***	-.200***	-.129***	.078*	-.057
무당파성향	-.012	-.054	-.142***	-.095**	-.064	-.159***	-.187***	-.135***	.030	-.012
진보-보수	.041	-.029	.003	-.018	.022	.081**	.067*	.020	-.113***	.060
F	7.77***	7.53***	28.82***	20.43***	4.32***	7.19***	13.92***	9.52***	6.43***	5.17***
R^2	.076	.073	.225	.170	.042	.068	.126	.089	.061	.050

* p<.05 ** p<.01 *** p<.001

1) 대인신뢰

(1) 특수신뢰

특수신뢰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결정계수 R^2은 .076으로서 회귀선의 설명력은 7.6%이다. 독립변수들의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상태와 관련된 변수들인 건강상태(.118)와 삶의 만족도(.159)만이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가족이나 친구 등 친밀한 사람들에 대한 특수신뢰 수준이 높다. 반면에, 사람들 사이에서 객관적 차이를 보이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수들은 이러한 특수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신뢰는 신뢰주체와 신뢰대상 사이에 공유하는 귀속성('특성의존적 신뢰')이나 일치감('일치감의존적 신뢰')을 신뢰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이는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남는 요인은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상태이다.

(2) 일반신뢰

일반신뢰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결정계수 R^2은 .073으로서 회귀선의 설명력은 7.3%이다. 독립변수들의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가구 월수입(.119), 삶의 만족도(.078) 및 정치관심(.106)이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야당성향(-.077)이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가구 월수입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치적 관심이 많을수록 자신과 이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일반신뢰 수준이 높고, 야당성향일수록 이러한 일반신뢰의 수준이 낮다. 달리 표현하면,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거나 공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고, 야당성향의 사람들일수록 자기와

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다.

2) 제도신뢰

(1) 국가공동체신뢰

국가공동체신뢰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결정계수 R^2은 .225로서 회귀선의 설명력은 22.5%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회귀분석에 투입한 독립변수들 중 이념성향(진보-보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독립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연령(.083), 주관적 계층의식(.088), 건강상태(.134), 삶의 만족도(.318) 및 정치관심(.063)이 긍정적 영향을, 그리고 성별(-.065), 교육수준(-.099), 가구 월수입(-.125), 야당성향(-.139) 및 무당파성향(-.142)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주관적 사회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치관심이 많을수록 국가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높고, 반면에 남성이거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당 월수입이 많을수록, 그리고 여당성향과 비교해 야당성향이거나 무당파성향일수록 국가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낮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주관적 계층의식,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일수록 국가공동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둘째, 여성이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국가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셋째, 정치적 관심이 많을수록 국가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넷째,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국가공동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다섯째, 여당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야당이나 무당파 성향의 사람들일수록 국가공동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2) 지역공동체신뢰

지역공동체신뢰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 R^2은 .170으로서 회귀선의 설명력은 17%이다. 회귀분석에 투입한 독립변수들 중 연령과 이념성향(진보-보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독립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주관적 계층의식(.078), 건강상태(.089), 삶의 만족도(.314) 및 정치관심(.086)이 긍정적 영향을, 그리고 성별(-.082), 교육수준(-.081), 가구 월수입(-.113), 야당성향(-.105) 및 무당파성향(-.095)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사회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치관심이 많을수록 국가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높고, 반면에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 월수입이 많을수록, 그리고 여당 성향에 비해 야당이나 무당파 성향일수록 지역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낮다.

국가공동체신뢰와 비교해 특기할 점은 연령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나이 차이는 국가공동체신뢰에 영향을 미치나 지역공동체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념성향은 국가공동체신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신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진보-보수의 이념성향 차이는 국가공동체나 지역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차

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공동체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여타 독립변수들은 모두 지역공동체신뢰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그 방향도 동일하나, 다만 그 강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즉 분산이 작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3) 민주주의신뢰

민주주의신뢰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결정계수 R^2은 .042로서 회귀선의 설명력은 4.2%이다. 독립변수들의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095) 및 정치관심(.109)이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야당성향(-.080)이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신뢰가 높고, 반면에 야당성향일수록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신뢰가 낮다. 특기할 점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당 월수입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민주주의체제신뢰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체제신뢰에는 사회적, 경제적 변수가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정치적 변수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4) 선거신뢰

선거신뢰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결정계수 R^2은 .068로서 회귀선의 설명력은 6.8%이다. 독립변수들의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건강상태(.086) 및 이념성향(.081)이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야당성향(-.159)과 무당파성향(-.159)이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자신이 건강하다고 평가할수록 그리고 보수적이라고 평가할수록 선거에 대한 신뢰가 높고, 반면에 야당성향이거나 무당파성향일수록 선거에 대한 신뢰가 낮다.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선거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외의 결과이기는 하나, 건강상태는 여타 유형의 제도신뢰에도 여전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기할 점은, 민주주의체제신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변수들은 선거신뢰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신 여러 정치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5) 중앙공공기관신뢰

중앙공공기관신뢰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 R^2은 .126으로서 회귀선의 설명력은 12.6%이다. 회귀분석에 투입한 독립변수들 중 연령과 정치관심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독립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주관적 계층의식(.102), 건강상태(.094), 삶의 만족도(.120) 및 이념성향(.067)이 긍정적 영향을, 그리고 성별(-.065), 교육수준(-.089), 가구 월수입(-.076), 야당성향(-.200) 및 무당파성향(-.187)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념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중앙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고; 이와 반대로,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당 월수입이 많을수록, 그리고 여당 성향에 비해 야당이나 무당파 성향일수록 중앙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다.

특기할 점은, 국가공동체신뢰 및 지역공동체신뢰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계층의식, 건

강상태 및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 영향을, 그리고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 야당성향 및 무당파성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6) 지역공공기관신뢰

지역공공기관신뢰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 R^2은 .089로서 회귀선의 설명력은 8.9%이다. 독립변수들의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주관적 계층의식(.086), 건강상태(.098) 및 삶의 만족도(.142)가 긍정적 영향을, 그리고 교육수준(-.077), 가구 월수입(-.070), 야당성향(-.129) 및 무당파성향(-.135)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고, 반면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당 월수입이 많을수록, 그리고 여당 성향에 비해 야당이나 무당파 성향일수록 지역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다.

중앙공공기관신뢰와 비교해 특기할 점은, 지역공공기관신뢰에도 역시 연령과 정치관심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역시 주관적 계층의식, 건강상태 및 삶의 만족도는 긍정적 영향을 그리고 교육수준, 가구 월수입, 야당성향 및 무당파성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념성향과 성별은 중앙공공기관신뢰의 경우와는 달리 지역공공기관신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념성향(진보-보수)은 국가 차원의 중앙공공기관신뢰와 국가공동체신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지역 차원의 지역공공기관신뢰와 지역공동체신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사회단체신뢰

사회단체신뢰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 R^2은 .061로서 회귀선의 설명력은 6.1%이다. 독립변수들의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건강상태(.085), 정치관심(.094) 및 야당성향(.078)이 긍정적 영향을, 그리고 이념성향(-.113)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게 평가할수록, 정치관심이 많을수록, 그리고 야당 성향이나 진보적 성향의 사람일수록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다.

특기할 점은,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들이 사회단체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적, 경제적 변수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8) 교육기관신뢰

교육기관신뢰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 R^2은 .05로서 회귀선의 설명력은 5%이다. 독립변수들의 표준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주관적 계층의식(.080), 건강상태(.073), 삶의 만족도(.076) 및 정치관심(.094)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자신의 사회적(주관적 계층의식), 육체적(건강상태), 정신적(삶의 만족도)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정치관심이 많을수록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다. 그런데 정치관심은 정치의식의 범위의 문제이지 소위 '색깔'(이념성향, 정당성향)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때 교육기관신뢰에는, 민주주

의신뢰·선거신뢰·사회단체신뢰의 경우와는 달리, 정치적 '색깔'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리고 민주주의신뢰·선거신뢰·사회단체신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회적 변수들(주관적 계층의식 제외)은 교육기관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요약

아래 <표 10>에는 10가지 신뢰유형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정리해두었으며, 이 표 및 <표 9>를 바탕으로 각각의 신뢰유형 및 독립변수 사이의 영향관계의 특징을 약술한다.

우선, 10가지 신뢰유형별로 그 영향요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특수신뢰에는 오직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변수(요인)들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공동체신뢰, 지역공동체신뢰, 중앙공공기관신뢰 및 지역공공기관신뢰에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바, 이들 4개 신뢰유형은 다양한 종류의 변수들로부터 민감한 영향을 받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민주주의신뢰, 선거신뢰 및 사회단체신뢰에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변수 및 정치적 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사회적, 경제적 변수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반신뢰와 교육기관신뢰에는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경제적, 정치적 변수들이 선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대체적으로 사회적 변수들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신뢰의 영향요인들은 그 범주(육체적·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범주)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신뢰유형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영향요인(독립변수)별로 신뢰유형들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성별에 있어서 남성은, 통계적 유의성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신뢰유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여성에 비해 신뢰수준이 낮다. 둘째, 연령은 오직 국가공동체신뢰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모든 유형의 신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연령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신뢰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셋째, 주관적 계층의식,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및 정치관심은, 통계적 유의성을 불문하고, 10가지 모든 신뢰유형에 긍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삶의 만족도는 대부분의 신뢰유형에 대해 그 영향력이 가장 크다. 넷째, 교육수준 및 가구월수입은, 통계적 유의성을 불문하고, 모든 유형의 대인신뢰에는 긍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부분의 유형의 제도신뢰에는 부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정당성향 중 야당성향과 무당파성향은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불문하고, 사회단체신뢰에는 긍정적 방향으로 그리고 나머지 모든 신뢰유형에는 부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끝으로, 이념성향(진보-보수)은 보수적일수록 선거신뢰와 중앙공공기관신뢰에는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그리고 사회단체신뢰에는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때, 각각의 개별 영향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신뢰유형의 범위와 그 영향력의 방향 역시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신뢰유형별 유의한 영향요인(독립변수) 정리

독립변수 / 신뢰유형	육체적·정신적 변수	사회적 변수	경제적 변수	정치적 변수	유의한 변수 수
특수신뢰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	-	-	2개
일반신뢰	삶의 만족도	-	가구월수입	정치관심, 야당성향	4개
국가공동체 신뢰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연령,성별,교육수준 주관계층의식	가구월수입	정치관심, 야당·무당파성향	이념성향 이외 10개
지역공동체 신뢰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성별, 교육수준, 주관계층의식	가구월수입	정치관심, 야당·무당파성향	연령, 이념성향 이외 9개
민주주의 신뢰	삶의 만족도	-	-	정치관심, 정당성향	3개
선거신뢰	건강상태	-	-	이념성향, 야당· 무당파성향	4개
중앙공공 기관신뢰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성별, 교육수준, 주관계층의식	가구월수입	이념성향, 야당·무당파성향	연령, 정치관심 이외 9개
지역공공 기관신뢰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교육수준 주관계층의식	가구월수입	야당·무당파성향	연령,성별,정치관심, 이념성향 이외 7개
사회단체 신뢰	건강상태	-	-	정치관심, 야당성향, 이념성향	4개
교육기관 신뢰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주관계층의식	-	정치관심	4개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론과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우선 신뢰를 신뢰대상에 따라 대인신뢰 영역과 제도신뢰 영역으로 구분하고, 다음으로 대인신뢰 영역은 특수신뢰와 일반신뢰 2가지 유형 그리고 제도신뢰 영역은 국가공동체신뢰 등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이들 전체 10가지 유형의 신뢰의 현황,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부산시민들의 10가지 신뢰유형별 신뢰수준은 특수신뢰(71.25)-국가공동체신뢰(66.83)-지역공동체신뢰(66.52)-민주주의체제신뢰(63.5)-교육기관신뢰(54.84)-선거신뢰(54.58)-지역공공기관신뢰(53.66)-중앙공공기관신뢰(46.95)-사회단체신뢰(44.66)-일반신뢰(44.27)의 순으로 그 수준이 높다. 특징적인 점은 대인신뢰 영역의 두 유형인 특수신뢰와 일반신뢰의 수준이 양 극단을 차지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유형의 제도신뢰의 수준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수신뢰의 수준이 높은 것은 대체로 어떤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부산은 독일(75.55), 미국(76.33), 대만(76.55) 및 한국전체(73.34)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반신뢰의 수준이 낮은 것 역시 대체로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부산은 미국(54.78) 보다는 낮으나 여타 지역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Newton (2009: 349)의 언급처럼, 현대 대규모 사회에서 특수신뢰가 낮은 것이 필연적인 현상은 아니며, 다만 사회적 상호작용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신뢰가 또한 중요해진다. 따라서 부산은 일반신뢰 뿐만 아니라 특수신뢰의 수준도 더욱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제도신뢰영역에 있어서, 부산시민의 중앙공공기관신뢰 및 사회단체신뢰는 일반신뢰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신뢰수준은 다른 사회(일본, 독일, 미국)와 비교해 대동소이하다. 중앙공공기관신뢰 즉 중앙정부신뢰는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며, 부산 내지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신뢰는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인바, 낮은 정부신뢰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낮춘다. 한편 사회단체신뢰는 한국이나 여타 국가들에서도 과거에 비해 점점 낮아져 왔고 (정광호 2011: 134-145), 부산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사회단체의 여러 가지 기능 중 한 가지는 시민과 정부 사이의 매개체로서 공중의 관심사에 대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Warren 2001: 60-93). 그러나 신뢰받지 못하는 사회단체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시민사회 내의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다. 한편, 부산시민의 지역공공기관신뢰는 중앙공공기관신뢰 다음으로 낮다. 지역공공기관신뢰 역시 중앙공공기관신뢰와 동일한 문제의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부산은 한국전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회(대만, 일본, 독일,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최장집(2002: 230)이 진단하듯이 우리의 민주주의는 냉전반공주의, 온정주의와 가부장주의, 관료적 권위주의, 기술관료주의, 시장근본주의 등 민주주의의 기반을 잠식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힘과 조류들에 직면하여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

Putnam이 연구한 남부 이태리와 같이 특정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한국이나 미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들은 이들 사회에서 대인신뢰와 제도신뢰의 유형들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 즉 상호보완관계가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났다. 다양한 유형의 신뢰들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면 이러한 사회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신뢰이건 신뢰는 높은 것이 좋다. 그렇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부산시민의 신뢰수준을 높일 정책적 방안이 있을까? 본 조사연구 결과, 신뢰의 영향요인들 중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및 정치관심은 10가지 모든 신뢰유형에 긍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의 크기는 대부분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및 정치관심이 높아지면 여러 유형의 신뢰수준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을 높일 정책적 방안은 무엇인가? 쉽게 접근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관련해서는 주거지 인근에 "국민체육센터"나 체육공원들을 마련하고, 소외계층과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그 방도가 될 것이다. 한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도 있다(Putnam 1993a: 114). 도시공동체와 관련해서 지방정부는 '사람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도시어메니티 정책을 활성화하고, 교통체증을 줄이고, 보행자도로를 편안하게 만들고, 야간의 방범이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등등의 정책이 이와 관련된다. 정치적 관심과 관련해서, 정치적 무관심의 원

인은 현대 정치과정의 복잡성이나 정치나 정부에 대한 불신 등 정치구조적인 것들도 있고, 정치적 무력감이나 소외감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효능감의 상실 등 개인적 것들도 있다. 이런 모든 정치적 무관심의 요인들을 대면해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말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로컬 거버넌스나 지방정치의 활성화는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치관심의 증대 방안일 것이다. 실천이 문제이지 신뢰증진의 정책적 방안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다.

참고문헌

김우택·김지희. (2002). "신뢰의 개념과 신뢰연구의 맥락." 김우택·김지희(편). 「한국사회의 신뢰와 불신의 구조-미시적 접근」서울: 도서출판 간소화

김인영. (2002). "한국과 이탈리아의 (저)신뢰비교." 김인영(편). 「한국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거시적 접근」. 서울: 소화.

_____. (2008). "한국사화와 신뢰: 후쿠야마와 퍼트남 논의의 재검토." 「세계지역인구논총」 26(1): 5-29.

김지희. (2002). "한국사회의 신뢰수준." 김우택·김지희(편), 「한국사회의 신뢰와 불신의 구조-미시적접근」 pp.237-276. 서울: 도서출판 소화.

김태준 외. (2003). 「사회적 자본 형성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 측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병진. (2004). "국가기구에 대한 신뢰: 근대적 요인과 탈근대적 요인." 「시민사회와 NGO」 2(2): 87-118

_____. (2007).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41(3): 65-106.

박우순·서혜숙. (2004). "부산지역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동향과 과제." 「부산학 연구」309-364.

박찬웅. (1999). "신뢰의 위기와 사회적 자본." 「사회비평」19, 33-64.

박통희. (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33(2): 1-17.

_____. (2008). "저신뢰(불신)의 맥락에서 정책과정 참여와 정부위원회."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7(3): 45-66.

박희봉·이희창. (2009). "한국과 일본의 신뢰 특성 비교 : 신뢰 유형별 특성 및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보」43(4): 105-128.

부산발전연구원 도시정보센터. (2007). 「부산이미지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보고서.

서문기. (2001). "한국사회의 정부신뢰구조." 「한국사회학」 35(5): 119-146.

석현호·이정환·김상욱. (2004). 「사회학」. 서울: 그린.

유석춘·장미혜·배영. (2002). "사회자본과 신뢰: 한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비교연구." 「동서연구」41(1).

유석춘·장미혜. (2003).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공편역)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그린.

유석춘·왕혜숙·박소연. (2008).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 비교연구-동창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 17: 203-269.

이달곤. (2008). "신뢰받는 정부." 최병선·최종원(엮음). 「국가운영 시스템: 과제와 전략」. 서울: 나남. 63-92.

이수인. (2010).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의 관계와 성별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한국사회학」44(4): 162-203.
_____. (2011). “정서적 가족주의와 문화적 가치가 일반신뢰와 특수신뢰에 미치는 영향.”「경제와 사회」 통권 제92호: 169-204.
이재혁. (1998). “신뢰의 사회구조화.”「한국사회학」32(여름호): 311-335.
_____. (2006). “신뢰와 시민사회: 한미 비교연구.”「한국사회학」40(5), 61-98.
이종수. (2001).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사회과학논집」32: 67-86.
이희창·박희봉. (2010). “신뢰와 제도의 관계 : 문화이론과 제도이론의 효과 비교.”「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2): 131-156.
임혁백. (1999). “신뢰와 민주주의.”「한국사회학평론」. 5: 33-48.
정광호. (2011).「정부신뢰」. 서울: 법문사.
정광호·이달곤·하혜수. (2011). “지방정부 신뢰요인 탐색.”「한국행정학보」. 45(4): 181-202.
최장집. (2002).「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한준. (2003). “민주주의, 제도와 신뢰.”「신뢰연구」13(2): 23-31.
Banfield, Edward. (1958).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Chicago: The Free Press.
Barber, Bernard.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J: Rotgers University Press.
Bourdieu, P. (1980). “Le Capital Social: Notes Provisoires.”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31: 2-3.
_____.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Richardson J. G.(ed). New York: Greenwood.
Brehm, John and Wendy Rahn.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itical Science* 41(3): 999-1023.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Supplement)* 94: S95-S120.
_____.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Dasgupta, P. (1988). Trust as a Commodity, 49-72. in Gambetta D.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Oxford, UK: Basil Blackwell.
Deutsch, Morton. (1958). “Trust and suspic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2. 265-279.
Doney, P. M., Cannon, J. P., & Mullen, M. R. (1998).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National Culture on the Development of Trus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602-620.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구승희 역.「트러스트」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Gambetta, Diego. (1988). “Mafia: the price of trust.” pp. 158-175. in Diego Gambetta, (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Oxford: Blackwell.
Gibson, James L. (2001). “Social Networks, Civil Society, and the Prospects for Consolidating Russian's Democratic Transi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1): 51-69.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_____.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481-510.

Grootaert, C. (1996). "Social Capital, the Missing Link?" in *Monitoring Environmental Progress-Expanding the Measure of Wealth.* Washington, DC: World Bank.

Hardin, R. (1998). "Trust in Government. In Braithwaite." Valerie and Levi, Margaret (eds.). *Trust and Governance.* pp.9-27.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Hetherington, M.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_____. (2005). *Why Trust Matters: Declining Political Trust and the Demise of American Liber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 (1999). "Trust, Well-being and Democracy." in Mark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Kaase, M. & Newton, K. (1995). *Beliefs in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nack, S., and Keefer, P.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1288

Levi, M (1996). "Social and Unsocial Capital. A Review Essay of Robert Putnam's Making Democracy Work." *Politics & Society.* 24(6): 45-55

Levi, M., & Stoker, L. (2000). "Political Trust and Trustworthines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 475-507

Lewis. J. D., and Weigert, A. (1985). "Trust as a Social Reality." *Social Forces*. 63: 967-985.

Luhmann, N. (1979). *Trust and power*. New York: Wiley.

Mayer, R. C., Davis, J. H., &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709-734.

_____. 2007.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Past, Present, and Fut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2: 344-354.

Misztal, Barbara. (1996). *Trust in Modern Societies: the Search for the Bases of Social Order.* Cambridge: Polity Press.

Newton, Kenneth. (1999).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in Modern Europe." in Jan W. van Deth, Marco Maraffi, Kenneth Newton & Paul F. Whiteley eds., *Social Capital and European Democracy*. London: Routledge.

_____ (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22, No 2: 201-214.

_____. (2009). "Social and Political Trust." pp. 342-361 in R. J. Dalton & H.-D. Klingemann(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Nye, J. (1997). "In Government We Don't Trust." *Foreign Policy*. Fall, 99-111.

Nye, J. S., Zelikow, Philip D., and King, David C. (eds.). (1997).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박준원 옮김.「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서울: 굿 인포메이션. 2001.)

Pagden, Anthony. (1988). "The Destruction of Trust and Its Economic Consequences in the Case of Eighteenth-century Naples." pp. 127-141 in D. Gambetta(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Oxford, UK: Basil Blackwell.

Portes, Alejandro.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24.

Putnam, R. D. (1993a). *Mar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안청시 외 역.「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서울: 박영사. 2000.)

_____. (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_____. (1995).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8(4): 664-683.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Touchstone. (정승현 옮김.「나 홀로 볼링」. 서울: 페이퍼로드. 2009.)

Putnam, Robert D., and Feldstrin, Lewis M. (2003). *Better Together: Restoring the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Robinson, S. L. (1996). "Trust and breach of the psychological contrac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1: 574-599.

Rousseau, Denise M., Sim B. Sitkin, Ronard S. Burt and Colin Camerer.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3, No.3. 393-404.

Seligman, A. B. (1997). *The Problem of Trus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ims, H. (2001) *Public confidence in government and government service delivery*. Ottawa, ON: Canadian Center for Management Development.

Sztompka, Piotr. (1999). *Trust: A Sociological Theor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rren, Mark E. (2001). *Democracy and Associ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Zucker, L. (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53-111.

류태건(柳泰建): 1989년 프랑스 그르노블 정치대학(I.E.P. de Grenoble)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정치사상사이나, 근래의 관심분야는 지방자치 및 정치행태이다.「유교의 자연과 인간」(세종출판사 2002),「정치학으로의 산책」(한울 아카데미 2009. 공저),「지방자치의 이해: 한국 지방자치제도를 중심으로」(부경대학교 출판부 2012) 등의 저서와 "정치효능·정치신뢰·정치참여의 이론과 현실"(「지방정부연구」 2010) 등의 논문들이 있다(tgyoo@pknu.ac.kr).

<논문접수일: 2014. 1. 10 / 심사개시일: 2014. 1. 12 / 심사완료일: 2014. 2. 23>

Abstract

State of Trust and its Influential Factors in the Case of the Residents of Busan

Yoo, Taegun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state of trust and its influential factors in the case of the residents of Busan City, by means of a social survey performed by the author in July 2013. At first, 37 concrete objects of trust are classified in 10 types on the bases of theoretical viewpoint and empirical data analysis. On these 10 types of trust, the levels of trust of the residents of Busan are measured differently in the order of specific trust(71.25)-national community trust(66.83)-local community trust(66.52)-democratic system trust(63.5)-educational institution trust(54.84)-election trust(54.58)-local public institution trust(53.66)-national public institution trust(46.95)-civil group trust(44.66)-generalized trust(44.27). What is remarkable is that the two types of interpersonal trust, specific trust and generalized trust, hold at both extremes of order, while the other types of institutional trust hold between them. In matters of the influential factors, the survey analyses show that not only they have a tendency to influence by groups but also they, each or groups, have a tendency to influence according to the different types of trust.

Key Words: trust, social capital, Busan